'K-스마트 농업' 공공형 수직농장 시대 개막

장수에 전국 최초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준공

도-군-CJ제일제당 협업… 스마트 농업 새 전환점 마련

계절의 벽을 넘어선 농업이 전북 장수에서 현실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남면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의 준공식을 열고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도·군의원, 사업 참여기관인 CJ제일제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농업 혁신 현장을 함께 확인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농업 시설이다. 특히 국내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북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되며 시작됐다. 2024년 6월에는 전북자치도-CJ제일제당-장수군 간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 모델을 완성시켰다.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남면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등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뻐하고 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3개의 재배실과 작업장, 저온저장고, 회의실 등을 포함 총 2,01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청년농 6명이 입주하여 최근 미니로메인과 버터헤드 등 작물 수확을 시작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은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혁신 모델"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농업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K-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수직농장 준공은 지역 청년농업인들에게는 희망의 터전이자 군이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수직농장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원예단지 등 단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농 700명 신규 육성 △정착자금 이차보전,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농업 정착 유도와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으로, 전북형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민호 기자·장수=고판호 기자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화력발전소 대책 특위 출범

시민 건강권 등 위한 대응 최선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를 출범하고, 황혜숙 의원을 부위원장, 고경윤·정상철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위원은 최재기·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관내에 건설 추진중인 초고압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피해와 주민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길 위원장은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렴도 1등급 향해'… 도, 공무원 비위 신고 집중 홍보기간 돌입

10월 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운영… 익명제보시스템·전화상담 등 신고 채널 집중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개월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비위 및 소극행정 집중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획됐다.

홍보기간 동안 도 감사위원회는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시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익명제보시스템과 제보 상담 번호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지역 여건에 맞춘 포스터 부착, 홍보지 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협업 등으로 자체 홍보를 병행한다.

도민 누구나 전북도의 익명제보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063-280-2394, 2172)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직무 권한 남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물품 사적 사용, 소극행정 등 광범위한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익명제보시스템 이용 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체적 위협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제보된 내용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뤄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 중인 상황에서,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한 체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정례 개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도 병행 중이다.

또한 실국원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렴(淸力)업(UP) 책임관제'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사업, 민원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청렴 이행력 점검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며, "홍보기간을 통해 도민과 공직사회 간의 청렴 공감대를 확대하고,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예산 낭비, 도민이 직접 감시한다'

전북자치도, 감시단 4기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제4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감시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단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예산낭비 신고 △민원 검토 △현장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도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의견제시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행사에서는, 감시단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실제 사례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되어, 실제 신고·조사·제안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도민과 함께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시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새만금 국가정원 지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1차 월례회가 지난달 30일,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주관했으며 전북 12개 시·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장은 "새만금은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복합 생태공간으로, 생태적 가치와 광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서해안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말고, 새만금 국가정원 지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장은 이어 "순천만(남해안), 태화강(동해안)은 이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반면 서해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과 정책 편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전북 전체 의제로 끌어올리며 전북 의회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통합방위, 도민 안전 최전선" 지난달 30일, 35사단 김범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35사단 부대 소개 영상 상영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발표 △취약지역 해제 심의 △해안경계작전부대 장병과의 화상통화 △군·경·소방 장비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분양·투자유치 상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달 시범 운영 후 내달부터 본격 서비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025년 하반기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첫 공급(예정)에 앞서 상담 창구를 다양화하고 수변도시 분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카카오톡 전용 상담 채널인 '새만금개발공사 분양상담센터'를 오는 7월 시범 운영한 뒤, 8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분양 및 투자 관련 문의는 전화 통화나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번 상담 채널 개설을 통해 국내외 어디서든 카카오톡 APP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주요 분양 일정 안내와 공고 개시 알림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던 분양레터 구독 서비스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널 검색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새만금개발공사 분양상담센터'를 입력하거나,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카카오톡 상담 채널 개설이 수변도시에 관심을 갖는 고객과 잠재 투자자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실시간 정보 전달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도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카카오톡 상담센터 개설을 계기로 분양·투자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다채로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민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도청 내 '마을세무사 상담소' 운영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 2시~4시 무료 세무 상담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청 1층 마을세무사 상담소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담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로, 현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지방세·국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42)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단위에서도 총 7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수해 농가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피해 농가 내달 29일까지 신고 접수… 재배 작물·파종 전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ha당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민호 기자